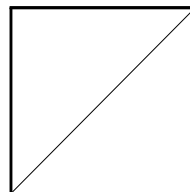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0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3. 30. (제 6 차)	

마크자산운용(주)(舊옵티멈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3. 30.

1. 의결주문

마크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크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준법 감시인 미선임',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2조, 제44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및 임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 마크자산운용(주) :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 ☐ ■■■이사 ○○○ : 주의
- ☐ ■■■이사 ○○○ : 주의적경고

나.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 ☐ 마크자산운용(주)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 ■■■이사 ○○○ : 주의

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 마크자산운용(주) : 기관경고,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이사 ○○○ : 주의적경고

라.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이사 ○○○ : 주의

☐ ■■■이사 ○○○ : 주의적경고

마.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 마크자산운용(주)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이사 ○○○ : 주의

바.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마크자산운용(주)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이사 ○○○ : 주의

사. 준법감시인 미선임

☐ 마크자산운용(주)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이사 ○○○ : 주의

아.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 마크자산운용(주)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 ■■■이사 ○○○ : 조치생략

☐ ■■■이사 ○○○ : 조치생략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불임>

다. 관계부서 협의

- ☐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2021.6.3.) 심의필
-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021.9.1.) 심의필
- ☐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2.3.24.) 심의필

<별지>

마크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마크자산운용(주) :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준법감시인 미선임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제5호·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7호·제2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 · 제2항 제8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이사 ○○○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준법감시인 미선임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제1항 제4호,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제1항,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제3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 · 제2항 제8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 ㉮㉮이사 ○○○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제8호,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2. 조치사유

가.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마크자산운용(주)은 (주)○○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주)○○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 '▽▽▽' 펀드를 운용하면서,
 - (주)○○가 마크자산운용(주)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X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주)○○에 출자금 □□만원을 대납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지인인 OO으로 등재한 후
 - 20XX.XX.XX. '▽▽▽' 펀드가 (주)○○에 ㉔㉔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제3자가 보기에 펀드에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운용지시하고,
 - 20XX.XX.XX. '▽▽▽' 펀드가 (주)○○에 ㉔㉔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당일 마크자산운용(주)이 법무법인 ◎◎에 ☆☆원을 송금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마크자산운용(주)은 20X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펀드의 수익증권 ㉔㉔원을 포함한 총 ☆☆억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 펀드를 설정하고,
- '20XX.XX.XX. 마크자산운용(주)이 ●●(주)에 수익증권 ㉔㉔원을 양도하고, 펀드가 동 수익증권 ㉔㉔원을 포함하여 총 ☆☆억원의 수익증권에 대한 TRS계약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 사실상 '△△△' 펀드가 마크자산운용(주)으로부터 수익증권 ㉔㉔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다.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마크자산운용(주)이 20XX.XX월 설정한 '◆◆◆'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주)의 연계대부업체인 ◎◎(주)가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후,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을 수령하거나 ▼▼(주) 및 ◎◎(주)에 미상환원리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 마크자산운용(주)은 (주)●●이 ▼▼(주)의 제공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심사 결과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이후에는 ▼▼(주)이 펀드의 투자

금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금을 관리하며 마크자산운용(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 ▼▼(주) 등의 유동성 부족 등 원리금수취권 및 매수청구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자금관리자인 ▼▼(주)의 펀드자금 유용, 자금관리 절차 미준수 등 운영위험과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주)의 부도와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 ①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 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월말 현재 '◆◆◆' 펀드가 환매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㉔㉔억원 상당 원리금수취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라.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 보유 대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채권 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도
- ☐ 마크자산운용(주)은 20XX.XX월 '◆◆◆' 펀드가 투자한 원리금수취권 ●●개가 대출중개업자인 ▼▼(주)의 펀드 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고, 20XX.XX월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주)가 폐업하였음에도,

- 동 ●●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 및 평가를 20XX.XX.XX.까지 지연하였고,
- 20XX.XX.XX. 평가 시에는 ▼▼(주)이 제시한 회수가능금액이 원금의 ☆☆%에 불과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개 원리금수취권을 원금의 ㉔㉔%로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마.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 ☐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중개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 (20XX.XX.XX.)하기 전에 ☆☆☆를 위해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바.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20XX.XX.XX.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익증권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사. 준법감시인 미선임

-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주)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아.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주)은 (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舊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1.5.20. 시행되기 이전의 것)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4. (생략)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 제1항·제2항 관련)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0조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9.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39.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제238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8. (생략)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 ④ (생략)

⑤법 제4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8. (생략)

9.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신용평가회사
 -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자. 법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19호	6,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 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

1.1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에 적용한다.

1.2 이 기준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3 이 기준에서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을 말한다.

1.4 이 기준에서 “증권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제1호·제4호·제5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의 증권 및 대출채권을 말한다.

2.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3.1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2.3.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2.3.6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2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3.2.1 원금 :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2.3.7”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 처리한다. 다만, 부도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2.3.7”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

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별표] 2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1호	5,000
고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7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②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7. (생략)

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

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 5.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

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1.>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

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
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
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
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
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
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
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
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
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3.22., 2017.10.19., 2020.5.13.>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 제 <2017.10.19>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A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개정 2017.10.19>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839